

# 이낙연 전 총리,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나라를 어찌려고 폭주하나”

“중전선언, 남북·북미간 합의 사안... 노태우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 등에도 포함  
대통령이 속히 국민앞에 사과하고 보좌진 문책해야... 이젠 나아질 때도 되지 않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중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남북간 북미간 합의를 통해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전임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언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전임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죄후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나라를 어찌려고 그렇게까지 폭주하는가. 집권세력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위기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전선언 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간 북미간에 여러 차례 합의된 사안



이다. 보수정부였던 노태우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포함됐다”며 “중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남북 정상이 확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라며 “중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합의됐다. 그것을 ‘반국가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이어 “폭언 다음 날 대통령실은 문제의 발언이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변명했다”며 “대통령이 그것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반국가세력’ 같은 말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큰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언론이 전임정부를 겨냥했다고 받아들일 만한 표현을 대통령이 공식발언으로 집어넣은 것은 대통령의 위함한 의식이거나 무지하고 무감각한 무능이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을 뒤늦게 주워담는 일만도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속히 국민앞에 사과하고, 보좌진을 문책해야 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장도 해임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준비없는 집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아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뉴시스



“신속 복구 지원”... 남원의료원 화재 피해현장 방문  
지난 1일 0시 2분경에 남원의료원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환자들이 대피한 가운데 이날 오후 김관영 도지사가 남원의료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입원환자 임시 수용시설인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 민주 김성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8억 등 총 11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8억원과 송천 1호 어린이공원 전시 및 휴식 공간 조성사업 3억원으로 구성됐다.



장 등의 체육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며,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 4월 개관 목표달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천동 자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송

천 1호 어린이공원은 고교학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하고 있지만, 이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공간과 주 방문자인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존 중인 유적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하는 시설과 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 시설 역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두 사업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별교부세를 시작으로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20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전주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여정 시작”

이용호 의원, 국립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사퇴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한 듯... 조강특위 “지원 여부 비공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제가 지지



하고 선택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남원·임실·순창이 인구 하향선에 미달해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한 이때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계기라는 생각에 지난 22일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큰 정치를 위해 따뜻한 풍지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던 선배 정치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보면서 저 또한 용기를 냈다”면서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남원·임실·

순창 국회의원으로서는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민원민생 및 남원성 전투 역사교과서 등재 △남원유소년스포츠클럽플렉스 구축 등 지역구 숙원사업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마무리 짓지 못한 국립의전원 설립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헌신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제가 더 큰 정치인으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변화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고 당협 36곳의 당협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이 의원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자리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직 지원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시스

## 출생신고, 출산 즉시 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수원 병장고 영아 사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87인 중 찬성 288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낄방교에서 영아 사신 2구가 발견된 ‘유령 영아’ 사건으로 촉발하게 됐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인력난 해결책’

### 도의회 세미나실서 전북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명예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전북의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북형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의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으로 김제시에 고려인동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전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은 “전북도에 외국인 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재외동포 및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IT단을 구성해 전북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김희수 대표의원은 “도내 산업현장과 농촌지

역의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인력 유입에 따른 문화차이, 언어 등 사회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교류가 필요하며, 외국인을 다른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잠재적 일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나혜수 국장은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배정인원인 400명을 모집하였고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유형도 고려인 마을 방문 등 적극 모집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